

부실 사립대 ‘폐교’ 법적근거 마련 설립자 정리금, 교직원 위로금 준다

교육위,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해산이후 남은재산으로 채무정리
직원 고용승계 등 후속대책 필요

경영난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정리를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직접 폐교를 명령하고 해산 절차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 이어 상임위 단계까지 진입한 것으로, 2010년 첫 발의 이후 15년 만의 성과다.

이번 법안은 신입생 충원을 저하와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 정부가 직접 구조개선 진단을 실시하고, 폐교나 법인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산 이후 남은 재산에서 채무 정리와 교직원·학생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마친 뒤, 잔여 재산의 최대

15%는 설립자에게 ‘해산정리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설립자의 자발적 폐교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사립대의 경우 기존에는 폐교 시 학교 재산이 전액 국가로 귀속돼, 설립자 입장에서는 문을 닫을 유인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가며 교육의 질 하락, 교직원 급여 체불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부실 대학을 압박해 왔지만, 법적 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 한계였다.

실제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은 22곳에 불과했고, 자진 폐교는 6곳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 진단 결과에 따르면, 총 14개 대학이 교직원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위기 대학’으로 판정됐다.

법안에는 교육부 산하에 ‘사립대학 구조개선심의회’를 설치해 구조개선 조치와 해산 절차를 심의하도록 했으

며, 전담 기관 지정과 함께 교직원과 학생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폐교에 따른 교직원 고용 승계나 재취업 지원 방안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아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교육위 회의에서는 하나의 학교법인이 여러 대학을 운영할 경우, 일부 대학만 폐교해도 나머지 대학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보완됐다. 자발적 폐교 대학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의 출석해 “의결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이 공포한 후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복날 앞두고… 닭고기 가격 30% ‘쾅충’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7월호
육계 전년대비 27.9% 상승 전망
여름 과일·채소 가격 오름세 비상

한여름 삼복을 앞두고 닭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박·참외·여름배추 등도 가격 오름세가 예측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가 3일 발표한 ‘농업관측 7월호’에 따르면 7월 육계 산지가격은 kg당 2000원으로 전월(1892원) 대비 5.7% 올라 전년(1563원) 대비 27.9%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평년(1743원) 대비로도 14.7%나 높은 수준이다.

육계 가격은 통상 7~8월 복 성수기에 오르지 않지만 올해는 4~5월에 이미 2000원대를 기록하는 등 높은 가격 수준에 달한 상황이다.

닭고기 가격은 올해 1월부터 1927원으로 시작하며 높은 수준을 보이다 4월에 2265원으로 2000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4월에 기록한 1860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됐던 것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지난달 브라질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산 수입이 재개됐고, 이달 하순부터는 대체 수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닭고기가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입국인 태국산 닭고기가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닭고기 가격 안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등 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할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름 과일·채소 가격의 오름세도 비상이다. 7월 배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10kg에 1만1000원으로 전년(1만448원) 대비 5.3%가량 오를 전망이다. 평년(9596원) 대비로는 14.6% 높은 수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추경 집행 앞두고 생활 물가잡기 총력전

李 정부, 하반기 경제성장률 과제

“매일 사는 달걀·라면 가격에 중점
중소·중견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채감물가 안정 기여할 것으로 보”

추가경정예산이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쿠폰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면 내수 진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물가 자극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올해 5월(+1.9%) 2% 밑에 머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2.2%)에 또 2%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하반기 중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추경이 큰 몫을 할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치솟을 경우 위축된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뎠다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는 먹거리 등 민생과 관련성이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당장 우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서 중요한 건 물가 관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내가 매일 사는 달걀의 가격, 라면의 가격 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이달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생계비 부담과 채감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물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경에 포함된 산란기 케이지 교체 경우 계란값 안정 효과



러브버그를 비롯해 모기, 해충 등이 기승을 부려 유통업체의 방충용품 매출이 증가한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기피제 및 살충제가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가 있고, 마른김 설비 교체 지원은 생산을 늘려 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도 채감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미국의 관세조치, 여름철 기상여건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고 보고 수급·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산지가격체계 투명화 및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한다. 오징어 명태 등 수산물도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5240→6240t, ~7월말)한다. 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배추·무 등도 역대 최대 비축물량을 확보해 추석 전까지(8~9월) 3만t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했다. 정유·주유소 업계에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여

름철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물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추경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왔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미달한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인해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2차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은 내수 부진과 미국 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1%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내외 기관 다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을 쏟아 냈다. 기재부 역시 지난달 5일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당초 1.8%에서 1% 미만으로 재조정하고, 대응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덩치 커진 서비스산업… 생산성 ‘지지부진’

한은, 서비스 산업 생산성 평가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생산성·효율 측면에서의 질적 개선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글로벌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조기술과 결합해 수출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서비스업 비중은 제조업보다 더 크게 확대됐다.

1990년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대 중후반에서 정체된 반면 서비스업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기준 명목 GDP의 44%를 차지한다.

취업자 비중도 서비스 산업에 쏠렸다. 제조업의 취업자수 비중은 1989년 28%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65%를 차지했다.

문제는 서비스업 산업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기업간 거래(B2B) 업종을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반면 고용측면에서는 여전히 소비자 대상 거래(B2C)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B2C서비스업은 서비스업 총고용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나누리 기자 yul115@

“코스피, 단기 과열권… 리스크 관리 중요”

» 1면 ‘상법 개정發…’서 계속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는 “한국 증시가 오랜 기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수준을 지속한 것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과 높은 거버넌스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상법 개정과 같은 제도 개선책이 실행되면 기업의 자기자본비용(COE) 중 거버넌스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 전망도 나쁘지 않다. 재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4일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조2684억원어치를 샀다.

반면 신종훈자의 생각은 다르다. 증시 흐름에 대해 “오버슈팅(단기 과열) 성격이 짙다”는 걱정이 크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상태로, 언제든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며 “미국의 관세 위협 재개나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같은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 주변을 맴돈다. 투자 자금이 쏠리는 지금이야말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달려 약세가 강하게 이어진다면 장기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원 기자 zelkova@